

 국토교통부		보도자료		
		배포일시	2020. 4. 8.(수)	
달서	주거복지정책과	담당자	· 과장 김석기, 사무관 박승연, 주무관 장휘량 ☎ (044)201-4740, (044)201-4868	
	공공주택지원과		· 과장 최아름, 사무관 박선영 ☎ (044)201-4740, (044)201-4868	
보도일시		2020년 4월 9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4. 8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쪽방·고시원 주민들 보증금 없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.

- ◆ **[공공임대]** '25년까지 4만호 공급, 보증금·이사비·생활집기 패키지 지원
- ◆ **[주거급여]** 지원금액 23.3→26.6만원(서울), 중위소득 44→45%로 확대
- ◆ **[금융지원]** 가구당 5천만원 1%대 초저리 대출상품 지원
- * '25년까지 전국 모든 市 지역에 주거복지센터 설치, 정부지원 확대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가 실시한 비주택 현장조사* 결과에 따르면 쪽방·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의 72%가 공공임대 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- 특히, 청년·신혼부부에 비해 주거복지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중장년 1인 가구(45~64세)가 42.8%로서,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.

* (비주택 현장조사) 국토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고시원, 쪽방, 비닐하우스 등을 현장 방문하여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를 발굴·조사('19.12월~'20.2월)

□ 국토교통부는 비주택 현장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공공임대 이주희망 가구에 대해 주거상향 지원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.

- 고시원, 쪽방,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주민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할 경우 보증금·이사비와 생활집기가 함께 지원되며,
- 주택물색 및 이사 도우미를 운영하여 장애요인으로 인해 공공임대 주택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.

1. 공공임대이주희망 현장조사 결과

- 이번 조사는 행정복지센터·쪽방상담소 등의 찾아가는 상담인력 3,015명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주거실태와 임대주택 이주희망을 조사하였으며,
- 조사에 응답한 8,875가구 중 **중장년이 48.1%**, 65세이상 고령가구가 **42.8%**로 나타났고 응답가구의 **72%(6,359가구)**가 이주를 희망하였다.

구 분	~25세	26~34	35~44	45~54	55~64	65세이상
연 령 비 율	1.6%	2.1%	5.4%	15.5%	32.6%	42.8%
응답가구수	140	182	481	1,380	2,896	3,796

- 이주희망 비율은 고시원과 여관·여인숙이 80%이상으로 가장 높았고, 비닐하우스·컨테이너 거주가구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.

구 분	계	고시원, 고시텔	여관, 여인숙	쪽방촌	다중생활 시설	비닐하우스	컨테이너	기타
희 망 비 율	71.7%	81.8%	80.3%	66.3%	65.2%	63.1%	52.3%	86.4%
이주희망가구	6,359	2,997	118	2,225	30	611	340	38
응답가구수	8,875	3,665	147	3,355	46	968	650	44

-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가구의 이주희망 비율이 높았으며 지방 소도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주희망 비율(58.4%)이 낮았다.

구 분	계	서울	경기	인천	기타 광역시	기타 시도
응답가구수	8,875	3,928	1,554	406	1,870	1,117
이주희망가구	6,359	2,861	1,131	283	1,432	652
희 망 비 율	71.7%	72.8%	72.8%	69.7%	76.6%	58.4%

- 거주기간은 쪽방의 경우 응답자의 67.9%가 3년이상 거주하는 등 거주 기간이 길었고, 고시원은 상대적으로 단기거주 비율이 높았다.

구 분	계		쪽 방		고 시 원		비닐하우스		기타	
	가구수	비율	가구수	비율	가구수	비율	가구수	비율	가구수	비율
1년미만	1,237	15.3%	459	13.7%	676	20.6%	34	4.6%	68	10.0%
1년~3년	1,635	20.3%	618	18.4%	821	25.0%	63	8.4%	133	19.6%
3년이상	5,190	64.4%	2,275	67.9%	1,786	54.4%	650	87.0%	479	70.4%

2. 공공임대 이주희망자 패키지 지원

- 국토부는 공공임대 이주희망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패키지 지원을 위해 지자체*, 공공기관, 관련 부처가 임대주택 공급과 이주지원, 자활 돌봄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체계를 구성하였다.

* 서울, 인천, 광주, 부산 등 전국 11개 지자체를 주거상향 사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

- 이주 희망자들에게는 주택물색과 이주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밀착 지원하며,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 일자리·자활·돌봄 등의 지역복지 서비스도 지원한다.
- 공공임대주택에는 냉장고·세탁기 등 필수 가전을 빌트인으로 설치하고, 주거복지재단·서민금융재단 등과 협력하여 보증금(전액)·이사비(20만원)·생활집기(20만원)를 지원한다.
- 아울러, 공공임대 정착 쪽방 선배와의 모임(용산구), 입주선물(광명시), 반찬나눔(인천 미추홀구), 집들이 프로그램(중구) 등 현장 여건에 따라 공공임대 이주를 촉진하기 위한 다채로운 특화 사업도 시행한다.

< 주거상향사업 선도지자체 특화사업 >

지자체	특화사업	지자체	특화사업
서울 중구	▪ 우리 집 소개, 동네한바퀴, 지역사회 적응 교육	서울시 양천구	▪ 일자리 연계사업, 네트워크 모임
서울 용산	▪ 공공주택사용설명 교육 공공주택 이주선배 특강	시흥, 안산	▪ 보증부 월세주택, 일자리 연계, 노인맞춤형 돌봄
서울 동작	▪ 자산형성 및 사회관계 회복 취업알선, 직업교육	광명	▪ 채무조정 및 재무상담, 입주선물 지원(가구단지 연계)
서울 관악	▪ 고시원 맞춤 복지프로그램 심리·진로·생활상담	수원	▪ 지역 공인중개사협회의 협약체결(착한부동산 운영)
서울 구로	▪ 근로의욕, 직업기능훈련 취업알선, 사회관계 형성 등	인천	▪ 비영리단체-인천시-LH합동 대상자 발굴(아웃리치)
서울 강남	▪ 취업 알선 및 일자리 연계사업 추진	인천시 미추홀	▪ 안심전화 서비스, 의료지원 사업, 봉사단 반찬 나눔
부산 남구	▪ 공동체 활성화 사업(텃밭) 사각지대발굴 민간활동 운영	광주 북구	▪ 간병, 집수리, 안부살피기 등 The드림 케어센터 운영

3.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지원 확대

- (임대주택 공급확대) 국토부는 이주희망 수요를 감안하여, 쪽방·노후 고시원 우선지원 공공임대 물량을 연 2천호 수준에서 '20년에는 5.5천호*까지 확대하는 등 '25년까지 총 4만 가구를 지원한다.

* '20년 공급계획 : 5,500호(전세 3,000호, 매입 2,000호, 영구·국민 500호)

< 비주택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예시 >

	기존	개선
주거환경		
주거면적	0.5 ~ 2평(1.65㎡ ~ 6.6㎡)	4.84평(16㎡)
월임대료	평균 22만원	5만원(보증금 무료)

- (반지하 등 지원대상 확대) 지원대상도 반지하까지 확대하여 상습 침수지역과 노후주택을 중심으로 이주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·공공기관과 함께 주거상향 지원에 나선다.

- (임대료 지원 확대 등) 당장 공공임대 이주가 어렵거나 이주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거 급여를 통해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원한다.

- 특히, 금년부터는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중위소득의 44→45%로 확대 되었고, 지원금액도 서울 1인가구 기준 23.3→26.6만원으로 인상하였다.

* 임차가구 지원기준인 기준임대료를 지역/가구원수에 따라 7.5~14.3% 인상

- (고시원 전용대출 도입) 또한, 주거 여건이 취약한 노후고시원에 거주 중인 중장년 1인 가구 등을 위해 전세 보증금 전용 대출 상품을 신설하였다.

- ▶ (대상)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노후고시원 3개월 이상거주 무주택 세대주(연소득 40백만원 이하)
 - ▶ (대상주택)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전용면적 60㎡ 이하 주택
 - ▶ (지원규모) 최대 5천만원한도로 보증금 전액을 1%대 초저리(1.8%) 대출
- ※ 문의처 : 주택기금과 김미리 사무관(☎044-201-3341)

4. 쪽방·고시원 등 낙후주거지 개선

□ 주거상향 사업과 함께, 낙후주거지를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재창조하는 재정비·도시재생 사업 등도 역점 추진한다.

- 쪽방촌은 영등포 사례와 같이 입주민이 재정착하는 따뜻한 개발을 원칙으로, 지자체 제안을 받아 연내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도시재생사업 연계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적용한다.

< 기존: 영등포 쪽방촌 >



< 개선: 공공주택 지구 >



- (사업면적) 10,562㎡(사유지 77%, 국공유지 23%)
- (일정) '20년 지정, '23년 입주
- (주택공급) 영구임대주택 370호, 행복주택 220호, 민간분양 600호 등 총 1,190호

- 도심·역세권의 노후 고시원·여관 등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여 '25년까지 1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.

< 기존: 노량진 고시원 >



< 개선: 청년 공유주택 >



- 주택규모(3~5층) : 원룸형 8호, 셰어형 5호 등 총 13호
- 커뮤니티(B1~2층): 공유오피스(2층), 스터디카페·라운지(1층), 회의공간(B1층)

□ 이와 함께, 노후 고시원 화재안전 보강을 위한 스프링클러 지원사업,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기준 개선*(건축법시행령 개정, 4월 입법예고) 등도 지속 추진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.

* 지자체장이 여건에 따라 실별 최소면적, 창설치 여부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중(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, 건축법 시행령 개정중)

5. 지역밀착 주거복지 지원체계 강화

- 앞으로도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현장조사를 정기 실시하고, 주거복지센터 설치 지원, 선도 지자체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등을 통해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갈 계획이다.
 - 현장 거점인 주거복지센터를 ‘25년까지 모든 시에 설치하도록 지원하여 지자체 주도로 취약계층 이주수요 발굴과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도록 하고,
 - 주거복지 선도지자체는 현재 11곳에서 ‘25년까지 30곳으로 늘리고, 주거복지 마스터플랜 컨설팅(국토연구)등을 통해 지역에 맞는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.
- 공공임대주택 운영기관인 LH에는 “이주지원 119 센터”를 설치하여, 임대주택 입주상담과 이주지원 및 정착 단계 전반을 지원할 계획이다.
 - * 전국 10개소 : 서울(4개 권역), 인천, 수원, 안양, 대전, 대구, 부산,
- 아울러, 지자체에 재건축 부담금 배분시 주거복지 개선노력, 취약 주거지 밀집 지자체에 지원이 강화되도록 기준을 개선하는 등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방안을 지속 강구할 계획이다.
 - * 국가 징수분(50%)은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·기초지자체에 각각 50% 지원
- 국토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“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열악한 환경에서 밀집 거주중인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특히 질병에 특히 취약할 수 있는 만큼, 시급한 주거상황이 필요하다”면서,
 -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, 이사비·보증금 지원과 돌봄서비스 등을 결합한 종합 지원을 통해 주거상황을 적극 지원하겠다”고 밝혔다.

- 아울러, “무엇보다 현장에서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촘촘하게 작동해야하는 만큼, 선도 지자체의 다양한 특화사업을 지원하고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지역 주거복지 역량을 강화해나겠다”고 말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박승연 사무관(☎ 044-201-474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